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43호  
2018. 1. 15

## 정책동향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시장동향

- 2017년 11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
-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 결산

## 산업정보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으로 본 건설 시장

## 건설논단

- 무술년 새해, ‘노후 인프라 관리의 원년(元年)’으로 삼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2025년까지 BIM, AI 적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 -

### ■ 향후 5년(2018~2022년)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와 연구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기술 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임.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 엔지니어링 근로시간 단축 20%,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수주 100% 확대임.

### ■ 제1전략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중심

- 제1 전략은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건설 안전 강화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마다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함(<그림 1> 참조).
- 기술개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 기술개발임.
  - 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 방안은 현장 의존적 생산체계를 극복하는 첨단 공장형 건설기술 개발, 성능 중심의 건설기준 확대 지속, 다양한 국토교통 R&D 성과의 확대 적용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신기술 활성을 위한 개발자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임.
  - ②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방안은 체계적인 시장 수요 분석과 실적 확보가 용이한 분야의 플랜트 R&D 추진,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건설 수주 연계 R&D 사업 추진, 민간의 기술 수요 반영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수요 대응형 R&D 강화를 위한 시장 수요 및 환경 분석 심화 추진 등임.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건설 빅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산업 육성임.
  - ①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인프라 BIM 활성화 추진, 계획·설계·운영 단계 정보를 축적하여 Big Data 유통 강화 추진, 데이터 시스템 분석을 통한 인프라 관리 효율화 등임.
  - ② 건설 Big Data 유통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추진 방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참여 방식의 스마트 건설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설 신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 기술을 기반으로 발주자 등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CM for Fee', '사후 평가' 활성화 추진 등임.
- 건설 안전 강화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스마트 건설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정보체계

일원화, 인프라 유지관리 재원 확보, 친환경 기술개발 및 환경 관리비 개선 등임.

## ■ 제2전략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심

-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개편 및 육성, 건설인력과 교육, 기준 및 제도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과제를 추진함.
  - 산업개편 및 육성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임.
    - ①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의 추진 방안은 공공 공동 진출 및 통합발주, 설계자 주도형 발주사업 추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해외지원기구 설립 검토 및 정보시스템 확대 등임.
    - ②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을 위해 국내기준의 해외 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화, 공사비 단가 국제화를 통한 해외수주 역량 강화 등임.
  - 건설인력과 교육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력 관리체계 구축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육성임.
    - 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력 관리체계 구축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은 우수기술자의 경력관리 강화 및 우대 방안 수립, 역량 중심의 경력 관리 실시, 건설기술자 등급 기준 개선, 허위경력 검증 강화, 건설기술자 국내외 취업 지원 등임.
    - ②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교육 체계 개선 및 교과 개발을 통한 교육 혁신,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등임.
  - 기준 및 제도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술력 중심의 발주 심의 강화로 글로벌 기준의 발주제도 재정비, PQ 변별력 확보, 강소엔지니어링 업체 육성, 엔지니어링 손해보험배상 개선 등이 세부 방안임.

<그림 1>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

전략 I: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	
분 야	중점 추진 과제
기술개발	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②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
고부가 산업 육성	③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④ 건설 Big Data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
건설 안전 강화	⑤ 건설의 안전·환경 관리
전략 II: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 야	중점 추진 과제
산업 개편·육성	① Eng.의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② 국제 기준에 부합 하는 제도 구축
건설인력·교육	③ 글로벌기준에 맞는 경력 관리체계 구축 ④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육성
기준제도	⑤ 기술력 중심의 발주심의 강화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주요 내용과 평가

-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시 건설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피해 예방해야 -

### 공정위, 갑을(甲乙)대책 3탄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발표

- 2017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전(全) 과정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표 1> 참조).
- 이번 대책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2017년 7월)',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년 8월)'에 이은 3번째 사회적 약자(乙) 보호 대책으로 기존 하도급 규제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임.

<표 1>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8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 거래 구조 완화	①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 거래 강요행위 금지 ② 전속 거래 실태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수급사업자 협상력 제고	③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배제 ④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금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 지위 제고	⑤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⑥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확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한정 → ‘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 ⑦ 공사기간 연장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 ⑧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7개)	하위 거래 단계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⑨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⑩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 유도 ⑪ 경영간섭 행위에 관한 지침 마련 ⑫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 대금 체불 문제 개선
	공정 거래 협약 및 모범 사례 수평적 확산	⑬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확산 ⑭ 공정거래 협약이행 모범사례 발굴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
법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8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⑮ 기술 유용 억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강구 ⑯ 부당 특약에 대한 감시 강화 ⑰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 추진 ⑱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신고건 공정위 직접 처리 의무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⑳ 과징금 수준 상향 조정 ㉑ 고발 추진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㉒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 ㉓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 대책의 내용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건설하도급의 특수성 고려 필요

- 「하도급법」은 전(全) 산업을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기업(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대기업,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인 경우에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 대책의 내용은 건전한 경쟁 환경 구축에 있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하청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에 대한 전속적 거래 구조가 만연해있고, 중층하도급이 일반적이기에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건설 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가 대부분 중소기업임. 또한 중층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전속적 거래 구조가 발생하기 힘든 산업구조임을 고려할 때 일관된 법 적용으로 인한 원사업자 일방의 피해가 우려됨<sup>1)</sup>.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엄격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과잉·중복의 가능성이 높음.

## ■ 건설하도급 관련 일부 규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

- 종합 대책에서 제시한 일부 과제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후속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 제정 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는 공기 연장에 따른 원도급 대금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 따라서 공기 연장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 규정한 이번 대책은 원도급 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하기에 원사업자 일방의 피해가 우려됨.
  -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공공사 PQ 심사에 반영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요청에 대해 원수급자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강제 조항이 되기 때문임.
  - 원·수급사업자가 체결하는 특약의 경우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당사자 간에 조정 가능한 사적 계약 영역임.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에 따른 제재조치 및 사전 심사(PQ)·적격 심사 감점 우려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특약 설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추가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생성 및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수급사업자가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한 의무화 규정 개정 사항의 경우 체불에 대한 인지도점 등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징금 수준의 대폭 상향(5억원 → 10억원) 및 원칙적 고발 대상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대책 내용 또한 과도한 행정·사법 제재로 규제의 실효성만 강조한 행정편의주의적 대책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전영준(부연구위원·yjjun@cerik.re.kr)

1)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의 98.4%, 전문건설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기에 '원사업자=대기업,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인식에 따른 규제 강화는 부적합하며, 최근 5년(2012~2016년) 간 영업이익률 또한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평균 1.3%p 높아 타 산업과 같은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7년 11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

-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 공종별로 토목은 양호했으나 건축이 부진 -

### 2017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 2개월 연속 감소

●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2017년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9.5%, 4.7% 감소한 이후 9월에 1.2% 증가함. 이후 10월과 11월 각각 44.3%, 16.4% 감소하면서 다시 2개월 연속 감소함.

### 공공 부문, 건축 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

● 공공 수주는 토목 수주가 양호했으나 건축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2조 2,754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의 경우 도로 및 교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1조 4,761억원을 기록, 지난 7~10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9.0% 감소해 지난 10월 60.6%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 금액 또한 1,652억원에 불과함. 2013~2016년까지 11월 공공 주택 수주가 5,000~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표 1> 2017년 11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6. 11월	12,562.7	2,791.7	1,305.4	1,486.3	799.4	686.9	9,771.0	626.6	9,144.4	6,525.4	2,619.0
2017. 11월	10,505.3	2,275.4	1,476.1	799.4	165.2	634.2	8,229.9	827.8	7,402.1	4,777.5	2,624.6
증감률	-16.4	-18.5	13.1	-46.2	-79.3	-7.7	-15.8	32.1	-19.1	-26.8	0.2
2016. 1~11월	126,373.2	27,347.8	15,785.6	11,562.2	6,494.3	5,068.0	99,025.4	10,158.0	88,867.4	59,195.4	29,672.0
2017. 1~11월	120,302.3	24,997.5	15,587.9	9,409.6	4,779.1	4,630.6	95,304.7	13,200.8	82,104.0	50,855.0	31,249.0
증감률	-4.8	-8.6	-1.3	-18.6	-26.4	-8.6	-3.8	30.0	-7.6	-14.1	5.3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외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 민간 부문, 주택 수주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 2017년 11월 민간 수주는 토목 수주가 양호했으나, 주택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함.
  - 토목 수주는 기업들의 기계설치 공사가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6.8% 감소한 4조 7,775억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크게 증가했던 재건축 수주가 감소하고, 신규 주택 수주 또한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2조 6,246억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 건축은 공장 제외하고 모두 부진, 토목은 대부분 공종 양호

- 건축 공종의 경우 공장 및 창고 수주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이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 공장 및 창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8.0%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관공서 수주가 각각 32.5%, 32.4%, 7.6% 감소했으며, 기타 건축 수주도 40.4%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항만 및 공항 수주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항만 및 공항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3.0%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고속도로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9% 증가함.
  - 철도 및 궤도는 지난 2016년 11월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29.5% 급등함.
  - 토지 조성 및 상하수도 그리고 기계 설치 수주도 각각 2.5%, 5.2%, 8.6%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상하수도	기계설치	항만 및 공항
2017. 11월	4,942.6	1,141.4	1,457.5	518.8	141.2	598.6	83.0	477.5	170.6	520.9	164.8
증감률	-32.5	-32.4	78.0	-7.6	-40.4	117.9	129.5	2.5	5.2	8.6	-33.0
2017. 1~11월	55,634.1	16,395.9	12,582.4	5,631.7	1,269.5	7,651.5	1,446.1	2,865.5	1,200.0	5,981.4	1,381.8
증감률	-15.3	-14.0	54.9	-7.9	-11.7	12.9	-57.1	-29.0	17.2	20.1	-25.9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 결산

- 분양 실적은 32.6만호, 전년 대비 27.7% 감소, 청약경쟁률은 12.4:1 수준 -

### ■ 기타지방의 물량 감소 폭이 커, 수도권은 경기 지역만 감소

- 2017년 아파트 분양 실적은 32.6만호로 전년 대비 27.7% 감소함. 2015년 분양 실적이 51.9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분양 시장 규모가 60% 수준으로 축소됨.
  - 최근 5년 평균(2012~2016년)인 37만호와 비교하면 12.0%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인 30.3만호 대비 7.6% 증가한 수준임(<그림 1>, <그림 2>) 참조.
  - 조합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 분양 실적은 20.9만호에 그치며, 전년 대비 35.3% 감소함. 당초 계획 대비 분양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급자 금융 조달 어려움의 결과로 판단됨.
- 수도권은 16.5만호로 전년 대비 26.6%, 광역시는 6.1만호로 전년 대비 4.6%, 기타지방은 38.3% 감소함. 기타지방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물량 수준을 유지함.
  -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수도권 1.7%, 광역시 6.8%, 기타지방 27.0% 감소하여 역시 기타지방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는 전년 대비 경기도는 39.7% 감소하였으나, 서울(14.3%), 인천(15.7%)은 증가함.
  - 지방은 전년 대비 부산(35.3%), 광주(36.3%), 전남(10.3%)에서만 증가하였고 세종(-63.4%), 경북(-64.2%), 대구(-57.0%), 울산(-55.0%)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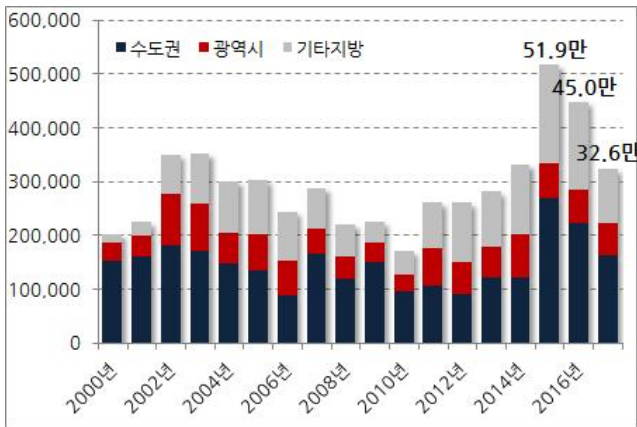
### ■ 평형별로는 중형의 감소 폭이 커, 청약 경쟁률은 12.4:1

- 중형(전용면적 60~85㎡ 이하)의 분양 감소폭(-30.7%)이 가장 컸고, 공공 분양은 증가함.
  - 전년 대비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21.8%, 대형(85㎡ 초과) 아파트는 23.6% 감소함. 다만, 광역시의 대형 아파트는 분양물량이 증가함(<그림 3> 참조).
  - 중형 감소폭이 크다 보니 중형 집중 현상은 일부 완화됨. (소 : 중 : 대 = 29.8 : 62.0 : 8.2)
  - 공공분양에서만 14.6% 증가하였고, 공공임대(-31.4%), 민간분양(-30.7%), 민간임대(-5.0%)는 실적이 감소함.
- 2017년 총 청약자수는 229.0만명이며 청약경쟁률은 12.4:1 수준을 나타냄(<그림 4> 참조).
  - 2017년 1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 현황은 1,277.9만 계좌로 약 18.6%가 청약에 참여하였고 전체 청약자의 98.4%(225.4만명)가 1순위 청약자임.
  -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10:1을 넘어섰으나, 충남은 청약 미달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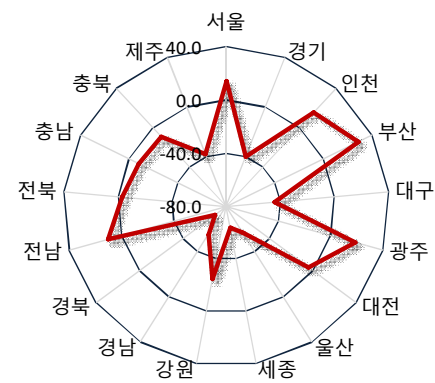
<그림 1> 아파트 분양 실적 추이

(단위 : 호)



<그림 2> 전년 대비 분양물량 증감률

(단위 : %)



<그림 3> 규모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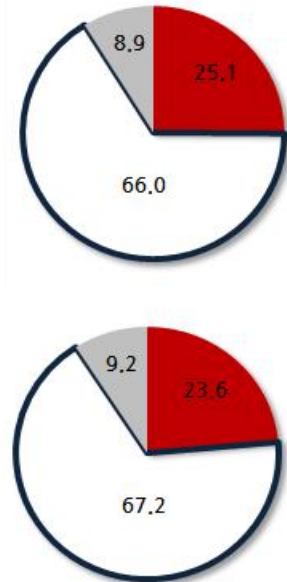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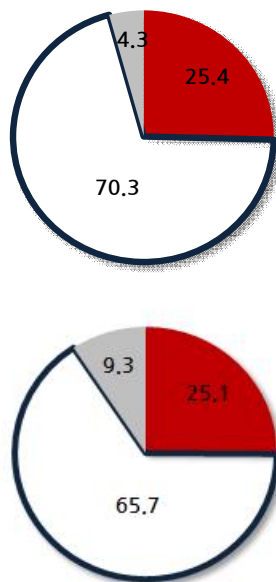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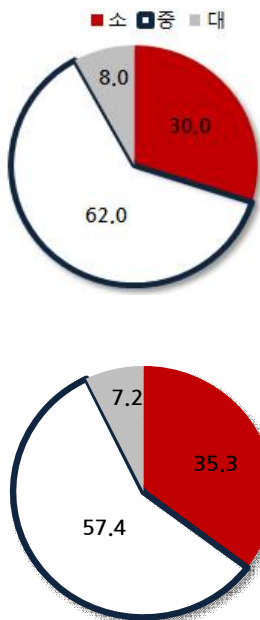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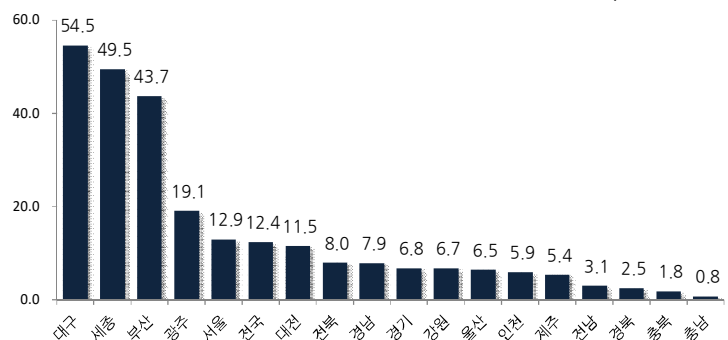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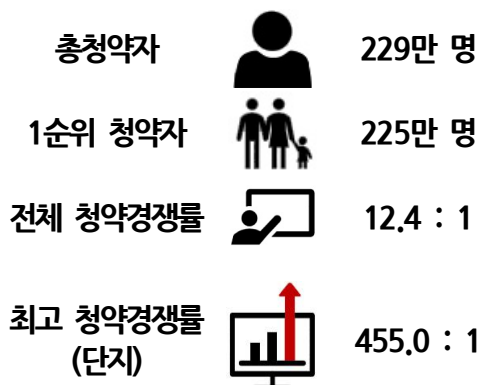
2016년  
↓  
2017년



주 :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60㎡ 이하), 중(60~85㎡ 이하) 대(85㎡ 초과)

<그림 4> 청약경쟁률

(단위 : 대 1)



자료 : 부동산114(주), 금융결제원 자료를 기초로 도식화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으로 본 건설 시장

- 정책 실행과정에서 등장할 건설산업의 신상품과 신시장에 주목해야 -

### ■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이행 현황

- 새해 벽두부터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소식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 어려운 내·외부적 환경에서도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사드배치로 냉랭했던 중국과의 경제관계 회복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어려운 외교 문제도 점차 해결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제·사회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같은 공약을 이행 중임.
- 대선공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행 속도와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타난 실행 의지,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많은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선 당시 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새로운 건설 시장을 전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건설상품 : 스마트시티, 도시재생뉴딜,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 대선공약에서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다뤘으며, 스마트 주거, 스마트도로, 스마트 도시 등의 사업을 제시했음.
  -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2017. 10)하였고,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키포프 회의도 개최됨(2017. 11). 스마트시티 특위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과정·기재·산업·행정·환경부), 산·학·연,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의 조성·확산을 논의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과 지방 분권 :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살기 위한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 방안으로 지방재정 자립과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 중임.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구도심 재생 및 서민 생활 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함. 매년 약 2조원 씩 총 5.8조원, 임대주택 건설 포함 시 11.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세워짐.
- 신재생 에너지 : 경주와 포항의 지진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북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 정책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국정운영 계획에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탈원전 로드맵 수립(산업·원안위) 등의 정책을 마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함.<sup>1)</sup>

## ■ 건설시장 :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 대선공약에서 국익을 위한 실용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표방함. 북한과의 평화 교류는 곧 새로운 경제 활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약은 북한을 경제협력 대상, 8,000만 인구의 한반도 내수시장, 대륙 진출을 위한 출구로 제시하였으며, 국정운영 계획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sup>2)</sup>로 구체화됨.
-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문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아세안 기업투자 써밋 연설(2017. 11. 9.)에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함. 4대 중점 협력 분야는 고속철도로 예시한 교통 분야,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로 예시한 에너지 분야, 수력발전으로 예시한 수자원 분야, 그리고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임.
  -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는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1천4백만 달러)으로 확대, 4대 분야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는 2022년까지 1억 달러 추가 조성을 발표함.<sup>3)</sup>
-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대통령은 3차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2017. 11. 9.)에서 ‘9개 다리 전략’을 제안함. 9개 다리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의 9개 분야에 대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의미함.
  - 또한,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4개 부처(기재·외교·산업·통일)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함.

## ■ 새로운 기회, 준비와 도전으로 재도약 기반 만들어야

- 新건설상품의 선점과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은 향후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동과 플랜트에 편중된 해외 진출 약점을 극복하고, 큰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 도움 될 것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남방·북방정책에서 건설 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제 시작 단계인 이들 정책에 주목하고, 새롭게 등장할 사업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임.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1) 다만, 시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함.

2) 3대 벨트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3) 연합뉴스(2017. 11. 13.), 문재인 대통령 ASEAN 기업투자 써밋 연설.

## 무술년 새해, ‘노후 인프라 관리의 원년(元年)’으로 삼자

새해가 되면 우리 선조들은 음양의 이치 속에 조그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종비결이나 운세를 봐왔다. 한 해 동안 복(福)은 부르고 화(禍)를 멀리 내쫓고자 하는 여망(興望)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중 하나이다. 한자의 연원을 최초로 밝힌 책인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화복(禍福)을 각각 ‘복자비야(福者備也)’와 ‘화자신불복야(禍者神不福也)’라 풀이한다. 복(福)자를 분해해보면 좌측의 시(示)는 하늘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고 우측의 복(畝)은 가득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복(福)은 하늘이 예비한 풍성하고 가득 찬 것을 잘 준비하여 순서대로 받은 것이다. 어느 한학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잘못된 인사말이며, ‘복 잘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본뜻에 맞는 새해인사라고 말한다.

화(禍)는 신이 예정된 대로 순서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여름철 비가 내려야 할 때에 가뭄이 들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복 받을 준비를 잘 해서 순서대로 불러들어 많이 받으려고 했다. 반면, 화는 가뭄과 같이 올지 모를 재앙을 멀리 내쫓아버릴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드는 등 미리 미리 대비하였다. 한마디로, 유비무환(有備無患) 그 자체다.

지난 12월 1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지역에서 암트랙(AMTRAK)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 위를 덮치는 사고로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도 및 도로 등 노후인프라 개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 주는

사고라고 트위터에 내용을 올렸다. 트럼프 트윗이 나온 뒤 바로 사고가 ‘신설 노선에서의 첫 번째 주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애도의 트윗 문구를 다시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열차 탈선 사고의 트윗 해프닝이 벌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뜸들어왔던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을 2018년 1월까지 공표하겠다고 마치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를 풀듯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언론에 발표하였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은 취임 후 100일 내 계획을 세상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대선 공약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재차 발표를 미뤘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1월에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발표하기보다 ‘원칙’ 수준의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일 큰 원칙은 1조 달러 투자 중 연방정부 지원은 2천억 달러이고, 나머지 8,000억 달러는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시설물관리 주체가 인프라 재건 투자 금액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인프라 관리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한다.

우리도 미국발 소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시행해야 한다. 무술년 새해가 ‘노후 인프라 관리의 원년(元年)’으로 대한민국 건설 산업사에 기록되기를 기원한다. <건설경제, 2018. 1. 9>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